

8·10사건의 재조명은 무엇을 뜻하는가

The meaning of interpreting the 8·10 Gwangju-grand complex-case

하동근*

8·10 광주대단지 사건은 현재 성남시의 공간적 사회적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그 기능은 아직도 계속되는 현재진행형의 사건이다. 현재 성남시가 안고 있는 사회적 공간적 문제의 근원은 8·10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 구시가지의 왜곡된 도시공간은 지금 성남시 최대의 이슈인 전면적 재개발 문제로 귀결된다. 신구시가지 문화적 장벽은 사건의 공간이미지 생성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동안 8·10 광주대단지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조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으나 사건을 시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접근함으로써 사건의 현재적, 실천적 의미를 얻는데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 의미는 생산되는 것이다. 의미가 생산되는 기제는 계열화와 배치이다. 사건과 관련된 그룹마다 상이한 계열화와 배치를 통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의미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성남시의 공간·사회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바탕에도 계열화와 배치를 통한 의미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필연적 과정들을 우회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접근들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사건의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주요어: 광주대단지 사건, 도시공간, 사회구성, 재구조화, 계열화, 불균형, 재조명

1. 8·10은 현재진행형의 사건이다

8·10 광주대단지사건(이하 8·10사건)¹⁾은 1971년 8월 10일 지금의 성남

*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장(oradix@snart.or.kr)

지역인 광주대단지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사건이다. 서울시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건설된 광주대단지는 계획도시, 인공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나 전기 등의 가장 기초적인 도시기반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채 철거민들을 이주시켜 생존조건과 관련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노력이 실패하면서 4~5만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주민항거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들의 요구조건은 ① 대지가역을 평당 1,500원 이하로 인하해 줄 것, ② 불하가격을 10년간 연부상환토록 해 줄 것, ③ 향후 5년간 각종 세금 면제, ④ 영세민 취로사업과 구호대책을 세울 것²⁾ 등이었고 사건의 효과로 모든 요구조건이 승인되었다. 이 사건은 국내에 미친 파장이 지대했을 뿐만 아니라 성남이라는 도시를 규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현재진행형 사건이다. 8·10 광주대단지사건은 지역의 각종 도시문제와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공간의 왜곡된 팽창과 도시내부의 불균등발전(신·구도심간), 토지와 주택가격의 심각한 불균형, 파행적 도시공간 재편(도시의 전면적 재개발과 신도시 건설), 교통문제, 비합리적 사회간접시설, 공간적 경계이면서 문화적 경계로 이분화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장벽문제 등이 그러하다. 이런 문제들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묶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성남지역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미결과제³⁾로서 도시공간과 관련된 문제그룹,

1) 이 사건은 아직까지 공식적 이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사건의 효과가 성남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규정하는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편을 고려하면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실로 미루어 이 사건의 성격이나 의미(효과)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해프닝 정도로 치부하려는 지역 내부의 권력세력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성남시의 민선5기 집행부는 사건의 40주년을 기념하여 공식적인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이는 사건의 공식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진전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가치중립적인 ‘8·10 광주대단지사건’으로 호명한다.

2) 성남지역사회발전연구소, 《성남연구》 창간호, 1992, 153~154쪽.

3) 지금 성남의 가장 큰 이슈는 구시가지 재개발이다. 지방자치시대 이래 성남은 8·10의 유산인 왜곡된 지역공간을 재구조화하는 문제를 지역행정의 과제로 떠

그리고 구시가지를 서민층의 도시로 재생산하는 공간이미지로서 작용하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그룹이 그것이다. 그러나 공간문제와 사회문제, 이 두 가지 그룹은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기보다는 서로를 매개로 재생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간문제와 사회문제를 변증법적 관계로 해석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이와 관련해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공간의 현상들 자체의 서술에 국한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 즉 사회총체적 구조와 연관시켜 공간을 구조화하는 메커니즘을 밝히는 방식으로 특징할 수 있다. 즉 “공간은 사회가 (재)생산되는 장이며 또한 매체이고, 한 사회의 구조적 메커니즘은 공간적 구조화를 통해 유지, 전환된다.”⁴⁾ 성남의 문제도 이 패러다임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8·10사건은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회성의 해프닝이 아니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진행형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성남이라는 지역이 이 문제를 우회해 갈 수 없는 이유임을 지시한다. 아니 오히려 8·10은 지역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핵심코드라고 보여진다. 도시의 모든 문제에 8·10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사건을 일으켰던 원인은 무엇이고 따라서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어떤 해석들이 있었고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이 사건의 어떤 측면이 현재 성남의 사회적 구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공간적 특징을 유발했던 요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남의 행정과 문화가 수렴되고 지향할 지점은 어디인

안아왔다. 이 과정은 2조 6천억이 소요되는 거대한 사업이다. 서울시가 주택단지 개발할 당시의 기획예산규모가 56억 원이었던 사실과(화폐가치의 인플레이 효과를 고려한다 해도) 비교된다. 이 사실은 8·10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임을 지시하는 한 측면이 된다.

4) 최병두, 『한국공간환경연구의 현황과 과제』, 《공간과 사회》, 풀빛, 1991, 48쪽.

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시도하려고 한다.

2. 사건의 의미

8·10사건이 아직 공식적인 이름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성격이나 의미가 규정되지 못했다는 현실과 연결된다. 그러나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의 의미를 규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민중항거(김동춘 교수), 민중항쟁(김준기 교수), 생존권투쟁(성남YMCA,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 등이 주민들의 관점에 선 입장이라면, 정부와 언론, 경찰 등 공식적 담론을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주민난동’이라고 규정했다.⁵⁾

이처럼 하나의 사건을 두고 그 의미가 극명하게 갈리는 현상을 철학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의미의 논리(Logique du sens)』에서 들뢰즈와 가타리는 사건의 의미가 ‘생산’되는 방식을 ‘계열화와 배치’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지점은 “의미는 ‘원칙이나 기원’이 아니라 그것은 ‘생산물’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발견되거나 복원되거나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제들(machineries)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다⁶⁾”라는 것이 들뢰즈의 생각이다. 의미는 이미 규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다는 것이다.

지금껏 8·10사건이 갖는 의미(효과)를 규명(찾아 헤맸)하려는 시도들은 의미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전제와 얽혀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기

5) 중앙언론은 난동이란 제목을 뽑았고 조선일보는 주동자에 대한 ‘매서운 다스림’(8월 12일자)을 주문했다. 치안국장은 ‘과격 불온한 전단내용’, ‘인원규모 및 난동자의 질’을 고려할 때 ‘용납할 수 없는 난동’이라고 규정(신상웅의 『광주대단지』)했고, 내무부의 보고서의 제목은 ‘성남단지난동사건분석’이었다. 특히 당일 오후에 서둘러 발표된 치안국장의 성명은 사건을 난동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암시되고 있다.

6) G. Deleuze, *Logique du sens*, 이진경, 『사건의 철학과 역사유물론』, 186쪽에서 재인용.

만 한다면 그 사건의 의미는 자동적으로 해명된다는 입장은 따라서 자료 찾기에 몰두하게 되고, 유실되고 허술한 자료로 인하여 비판적인 판단에 이른다. 하지만 주류담론이나 지역담론이 사건을 의미화하는 방식(의미를 생산하는 방식)을 관찰하는 것이 지금의 성남사회를 해석하는데 유일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의미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의미가 생산되었고 그것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재구조화 혹은 재생산하고 있는가에 있다는 얘기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사건의 의미가 재생산되는 방식이 ‘계열화와 배치’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사건⁷⁾과 관련된 행위자들의 ‘사실’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계열화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1) 각 행위자들과 관련된 사실들

(1) 국가와 자본의 입장

1960년대 이후 국가권력은 강력한 권위주의와 군사문화를 배경으로 자본축적과 산업화를 추구해왔다. 8·10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는 국가의 공간정책을 주목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신도시(공간의 구조화)와 자본축적,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는 다음의 언술에서 잘 드러난다. “국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공간을 ‘계획’하고 조정하며 특정 공간에 하부구조를 건설함으로써 가치법칙을 완수하려한다. 따라서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실체

7) 들뢰즈는 사고와 사건이 어떻게 구별되는가에서 사건의 논리를 유추해내고 있다. 그는 “사고란 사물의 상태가 시공간적으로 유효화(effectuation)한 것이며 사실(fact)에 관한 범주다. 반면 사건이란 어떤 사물의 상태나 사실을 다른 상태나 사실에 연관 짓는, 그런 한에서 관념적 성격이 개입된 범주다”라고 하여 사고와 사건의 경계를 설명하고 있다. 즉 사고(incident)는 우연(accident)히 발생한 사물의 상태와 연결된다면, 사건(event)은 다른 사실이나 사건과 계열화하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가수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면 그것은 사고이다. 그런데 그 가수가 반체제 인사이고 그의 차를 추돌한 버스에 승객이 없었다는 또 다른 사실과 연결될 때 그 사고는 사건이 된다는 것이다(이진경, 『사건의 철학과 역사유물론』, 『철학의 외부』, 2002에서 정리).

라기보다 자본축적과정과 함께 생산되고 재구조화되는 사회적 실체로서 자본 특히 독점자본과 국가의 공간전략 그리고 이미 그 지역에 형성되어 온 역사적 구조의 복합적 산물이다.”⁸⁾ ‘가치법칙’을 완수하고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공간의 구조화가 ‘집적과 집중’을 전략으로 할 것이다. 그렇다면, 초기자본축적의 공간전략은 도시화가 될 것이다. 그런데 1960년대 도시화전략은 ‘과잉도시화’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부작용의 내용은 도시시설부족과 도시환경악화, 노동시장의 과잉으로 인한 부담(비용)의 증가 등이다. 여기에서 성남도시화와 관련한 국가의 중요한 입장이 유추된다. 즉 성남의 도시화는 울산이나 여타의 도시화처럼 자본의 축적과 관련된 기보다는 ‘과잉의 처리’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국가의 포지티브한 전략이기보다는 네가티브한 전략적 성격을 갖으며 이는 사건을 처리하고 정리하는데 일관된 국가의 입장으로 나타난다.⁹⁾ 결론적으로 도시화의 부작용을 쓰레기를 치우듯이 처리하려는 입장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 입장을 대변한다.

(2) 서울시의 입장

8·10사건 이전까지 성남에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¹⁰⁾의 주체는 서울시

8) 한국공간환경연구회, 김왕배, 『자본축적과 지역불균등발전』, 1991, 81쪽.

9) 성남의 공간형성에서 자본은 제외된다. 이러한 사실은 분당신도시 건설에서 자본의 적극적 개입과 대비된다. 실제로 분당의 건설에서 건설자본은 노태우 정부의 약점을 끝까지 몰고 늘어져 유리한 용적률과 금융지원을 이끌어낸다(이에 관해서는 박지환의 서울대 인류학과 논문 『분당신도시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공간과 계급에 관한 연구』, 2003, 42~47쪽 참조). 이는 당시의 자본가계급이 강력한 국가권력에 대하여 매우 취약했었다는 사실로 일부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성남신도시가 자본의 축적과는 무관한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는 사실에 있다.

10) 이 사업의 정식명칭은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단의 주택단지 경영사업’이다. 이 사업은 1968년 5월 7일에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6월 12일에 언론에 발표된다. 승인과 발표 사이에 한 달이라는 시간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토지수용을 위한 전략이었는데 실제로 1968년에 서울시는 계획면적의 90%를 매입하여 성공적이었다. 계획상의 도시규모는 250만 평에 철거민 50만 명을 수용

였다. 사업주체로서 서울시는 인구문제와 무허가주택문제를 해소하려는 행정적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1967년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무허가주택 일소방안은 신도시건설, 무허가주택 현지개량, 시민아파트 건립의 세 가지 대책이었다. 그러나 주택개량은 미관적 한계, 시민아파트는 와우아파트 붕괴(1970년 4월)로 대책의 효용성이 없어졌고 신도시 건설만이 대책이었다. 서울시가 마련한 초기(1967)의 ‘대단지주택지조성계획’은 이런 불량건물 정리사업과 아울러 주택도시건설 및 인구의 지방분산책 구현 등과 같은 다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런 계획과 목적을 대폭 축소하고 오로지 철거민을 광주대단지에 정착시키기로 결정한다.¹¹⁾ 서울시의 행정계획이 갖는 도구적 합리성에 대하여는 행정문외한으로서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 다만 ‘선입주 후개발’로 대표되는 조급한 ‘철거민처리’¹²⁾와 공적 자금의 투자방식이 아닌 ‘경영사업’ 방식¹³⁾이 사업주체로서 서울시의 의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다.

하는 수준이었다.

- 11) ‘신도시 건설 계획’의 변질은 ‘선입주 후개발’ 방식과,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전에 철거민 강제이주, 그리고 주택시를 두 곳에 건설한다는 계획을 취소하고 광주대단지에 모든 철거민을 정착시킨 점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성남20년사 편찬위원회, 『성남시사』, 1993, 44~48쪽).
- 12) 1968년부터 1970년까지의 사업별 투자실적을 분석해보면, 택지사업과 도로사업이 62.1%를 점하고 있고 이것은 광주대단지 개발사업이 단순히 택지조성과 도로만을 개설한 사업에 불과하며 생활환경시설은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노용희, 『신도시개발론』, 박영사, 1973, 228~229쪽).
- 13) 이 경영사업의 예산계획과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이 사업의 ‘경영사업성’이 드러난다. 예산계획은 사업종료를 불과 13개월 앞둔 시점에서 확정된다(1969. 11). 또한 서울시는 ‘강남도시개발계획’(1970.6.17)을 발표한다. 이는 광주대단지의 땅값을 급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유보지 매각대금을 인상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1971년 5월 기존의 기획예산 56억 원보다 무려 36억 원이 증액...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1970년 계획에서 17억 원이었던 유보지 매각대금이 무려 3배나 늘어난 50억 원이었다. 즉 투기에 따른 유보지 매매가격인상이 광주대단지 사업의 예산확대를 가져온 주된 요인이었던 것이다(한상진, 『서울 대도시권 신도시 개발의 성격: 광주대단지와 분당신도시의 비교연구』, 『한국의 지역문제와 노동계급』, 문학과지성사, 1992, 61~101쪽). 그러면 입주민들의 생활문제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구체적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 그

(3) 주민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원회(분양지불하가격시정위원회, 후에 투쟁위원회)는 사건의 기획자/주체의 일부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위원회의 인적구성 및 계급적 성격에 대한 자료나 분석은 아직까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주력이 위원회의 고문인 정성천 목사와 그가 시무하는 교회의 장로(위원장 박진하 성남교회 장로¹⁴⁾와 집사들), 그리고 확인할 수 없는 11개 지구 대표들이었다는 사실, 대부분이 일반입주자였다는 사실, 그들의 요구사항이 주로 토지불하대금 및 각종세금과 관련되고 철거민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과소 대표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다음 사실들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그들은 철거민과 대비되는 일반입주자들을 대표한다. 즉 그들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 입주자이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를 갖고 있으며, 불하가격에 예민하다는 성격을 갖는다. 즉 자발적 결사를 할 수 있는 계급적 역량을 갖는다. 둘째 이와 연관되어서 철거민들을 사건에 유인하려는 입장을 갖는다. 셋째 비교적 평화적 방법(홍보와 참여인원수를 통한 압박)을 동원한다.

(4) 철거민의 입장

이들은 사건의 주력이다. 철거민들이 이 사건의 주력이 된 것은 그들의 생존환경이 극에 달하도록 열악했다는 사실과 연결될 것이다. 이들은 산업화과정에서 농촌으로부터 단신, 혹은 가구 이출된 노동인구이고,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거나 단순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취

저 “인구 10만 명만 모아 놓으면 어떻게든 서로 뜯어먹고 산다”는 이상한 생존철학만이 발견된다(장세훈, 『광주대단지사건과 3공 도시정책의 파행』, 《월간중앙》 3월호, 1992, 550쪽). 선입주 후개발과 경영사업이라는 대표적인 특성이며 이는 8·10사건의 핵심적 배경이 된다.

14) 필자는 그와 더불어 성남YMCA 이사로 활동한 적이 있다. 그 외의 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들도 같이 이사로 활동했다. 그들의 공통적 감성은 조직가나 전문 활동가이기보다는 기독교 신자로서의 수동적 사회봉사에 임하는 수준이었다.

업과 생계가 매우 불안정하고 계급적으로는 반프롤레타리아 혹은 톱펜 프롤레타리아가 대다수가 될 것이다.¹⁵⁾ 이들 계급의 특성은 스스로의 이해에 눈뜨 단일할 계급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들은 강제철폐와 강제이주를 통하여 성남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입주동기가 자발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은 많은 문제와 결부된다. 이들의 생존현실과 관련된 믿기 어려운 자료들은 무수하게 많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 요구나 이를 조직화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분류된다.

(5) 주동자/형사처벌자

이 사건으로 22명이 형사 입건된다. 그들의 직업은 노동과 목공이 주류를 이루고 상업 등도 있다. 이들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 많고 30대 초반도 있다. 필자가 인터뷰한 구속자 중 한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은 광주경찰서로 압송되어 2일 여에 걸쳐 고문수사를 받는다. 수사관은 그들이 간첩인 사실을 볼 것을 요구했고, 이를 강하게 거부하여 고문이 심화되었다고 증언했다. 이들을 행위자로 볼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필자가 주동자와 형사처벌자로 분절화시킨 이유는 이들을 계열상에 어떻게 배열하는가에 따라서 매우 상이한 위상을 갖는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추후에 상술하기로 한다.

2) 사건의 계열화와 의미생산

8·10사건은 광주대단지의 3만 명(혹은 5만 명)의 많은 주민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열악한 환경(철폐민)과 불하가격 및 각종 세금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일반입주자)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아무런 반응이 없자 관공서와 관용차 등을 파괴, 방화, 훼손한 사건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난동사건’, ‘주민폭동’으로 그리고, 한편에서는 민중항

15) 철폐민들의 계급적 위치와 관련해서는 김동춘 교수의 논문 참조(김동춘, 「71년 광주대단지 8·10항거의 재조명」, 8·10 30주년 심포지엄자료집, 2002).

쟁, 민중항거, 생존권투쟁으로 규정되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정반대의 함의를 갖는 해석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나를 살피는 것은 성남의 현실과 관련하여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

(1) 난동계열

이 계열은 사건의 핵심에 주동자들이 있다. 들뢰즈의 패러다임을 적용한다면 이들이 신체적 원인(cause)이고 치안국장의 성명이나 중앙언론의 역할은 준원인(quasi-cause)이 된다.¹⁶⁾ 이 계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사건의 원인보다는 사건의 현상을 강조한다. ② 철거민, 대책위원회, 서울시, 국가는 은폐되거나 축소된다(배치의 선택과 배제의 효과). ③ 이와 연결되어 철거민의 참상이나, 건설계획의 오류 등은 유보되거나 과소평가 된다(계열화의 효과). ④ 우연성이 강조된다.

(2) 주민계열

이 계열은 사건의 핵심에 철거민을 배치한다. 즉 국가와 서울시의 무모한 사업수행이 원인이라면 지역의 담론이 준원인이 된다. 이 계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사건의 현상보다 사건의 원인이 강조된다. ② 대책위는 과소평가 되고 형사처벌자들은 은폐된다. ③ 철거민들의 난폭한 행위는 유보되거나 과소평가된다. ④ 구조적 측면이 강조된다.

두 계열은 어떻게 수렴되는가? 첫 번째 계열은 사건의 우연성이 강조되다보니가 사건이라기보다는 사고(incident)의 성격이 강하게 된다. 즉 일회적이고 해프닝성이 강조된다.¹⁷⁾ 따라서 질 나쁜 난동자들이 없었다면

16) 들뢰즈는 사건의 실체를 신체적 원인과 표면적 효과의 이중인과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신체적 원인이 사건의 기계적 배치와 관련된다면, 표면적 효과는 언표행위(말이나 기호, 규칙 등)배치와 관련된다. 8·10과 관련시킨다면 난동적 행위들이 신체적 원인과 연결되고(원인), 법이나 언론, 이념 등과 관련된 행위들은 비신체적 원인(준원인)과 연결된다고 한다(이진경, 2002: 197~226).

17) 특히 치안국장은 ‘난동자의 질’이 이 사건이 난동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이 사건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았다고 느끼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여기에 대하여 두 번째 계열은 사건의 구조적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운동적 성격이 과대 대표되는 경향을 갖는다. 이들의 전정치적인 측면이나, 향후 생활조건을 개혁하려는 행위가 지속되지 못한 점이 무시된다. 따라서 대책위나 전위부대가 없었다 해도 이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대책위의 위상도 무시된다.

또한 두 계열이 생산한 사건의 의미는 서로 완벽하게 배제적(exclusive)이다. 이 경우 두 계열은 대결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첫 번째 계열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사건의 의미는 난동으로 통일된다. 그래서 8·10사건은 난동이 되었다.

그러면 난동으로의 사건의 의미화는 성남의 현실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물어야 할 차례이다.

3. 8·10사건이 현재의 성남을 규정하는 두 가지 측면(생산된 의미의 지역 정치문화적 효과)

들어가는 말에서도 언급했지만 8·10은 성남의 모든 도시문제들과 연관된다. 이를 공간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로 범주화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성남의 도시공간과 관련된 문제

광주대단지, 분당개발, 판교개발, 위례신도시 개발로 이어지는 성남의

제시한다(신상웅, 1971). 치안국장의 이 성명은 중앙매체들이 이 사건을 난동으로 호명하는 이유가 되는데 재빠른 대처는 이 사건의 성격을 선점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효과로 인하여 국가와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실패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알리바이를 제공받는다.

도시공간 재구조화는 파행적 구조의 연속이다. 파행이 파행을 낳는 형식이다. 당연히 구시가지는 다시금 전체 시가지의 재개발이라는 파행적 재구조화를 요청받고 있다. 파행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는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택지조성이 완성되기도 전에 철거민 입주를 시작하고, 건축허가면적에도 못 미치는 20평 택지분양, 엄청난 인구밀도, 미봉적 도시계획으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왜곡,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교통문제, 환경오염과 산업공해문제 등이 성남시 도시공간이 구조적으로 얹게 된 문제들이다. 기형의 도시공간구조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다. 구시가지는 성남시 전체 면적의 9.3%에 불과하지만 그곳에 성남시 전체 인구의 90%가 거주하고 있었다. 1975년 정부는 5·4조치를 통하여 구시가지 이외의 모든 토지의 개발을 제한했다. 구시가지의 공간문제를 해소하는 유일한 대안은 분당 지역으로의 분산이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노태우 정부는 강남의 아파트가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분당신도시를 건설한다. 그리고 이어서 판교신도시, 위례신도시의 개발이 이어지면서 구시가지의 공간문제 해결은 매우 난망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공간 문제는 다음에 언급할 사회구성의 문제와 연관되어 성남의 도시성격을 특징적으로 규정하는 요소가 된다.

2) 성남의 사회관계와 관련된 문제.

8·10사건이 ‘난동’으로 의미생산되고 ‘난폭한 사람들의 도시’ 혹은 ‘범죄자들의 도시’로 이미지 재생산되어버린 효과는 성남의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왜곡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성남사람들은 자기의 주거지를 당당하게 밝히기를 꺼려하거나 거짓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이력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서울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었다. 또한 밝히는 경우에도 8·10사건 훨씬 이후에 입주했음을 부가적으로 ‘해명’하는 수고를 해야 했다. 자기 지역에 대한 자긍심

의 부재는 주민들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지역행정의 큰 부담으로 남는다. 실제로 성남시는 ‘성남에 고향심기 운동’, 향우회를 통합하는 ‘시민화합 협의회’ 등의 다른 도시에는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도시이미지를 바꿔내는 데에 있었으므로 이 문제는 지금도 성남시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결국 이런 왜곡된 사회관계는 성남을 빈민층의 도시로 재생산한다. 분당개발 이전까지의 많은 지표들은 성남이 서민층 혹은 빈민층의 도시임을 밝히고 있다.¹⁸⁾ 이렇듯 왜곡된 도시공간은 사회관계를 이질화시키고 변질시킨다. 또한 왜곡된 사회관계는 공간과 사회구성을 재생산한다.

4. 사건의 의미를 다시 생산하기 위하여

8·10사건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한다는 일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들을 재구성하는 작업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8·10사건은 일회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왜곡된 공간과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필연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간과 사회의 변증법적 운동과정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와 의회는 이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기존의 정책을 반성적으로 재검토해

18) 1984년의 면세점은 15만 원이고 중산층 기준소득이 32만 원이었던 사실과 비교하면 35% 이상이 면세점 이하이고 취업인구의 90%가 중산층 이하였다. 그 밖에도 교육수준지표나 직업별 산업분포 등이 성남주민이 서민층 혹은 빈민층임을 공통적으로 확인시키고 있다.

1984년 성남시 취업인구의 월평균 소득액

월소득총액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30만 원~	계
인원수	14,169명	34,610명	41,725명	31,599명	16,891명	138,994명
백분율	(10.2%)	(24.9%)	(30.0%)	(22.7%)	(12.2%)	(100%)

출처: 이동호, 「성남시 인구가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1984, 75쪽.

야 한다. 문제의 소재가 지역 외부에 기인하는 문제는 지역외부와 관련된 요인들과 정면으로 대응하고 지역내부와 관련된(공간의 문제) 요인은 내부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8·10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실천하는 방식이다.

❖ Abstract

The meaning of interpreting the 8·10 Gwangju-grand complex-case

Ha, Dong-Deun

The 8·10 Gwangju-grand complex-case is an important on going case defining the nature of space and society in Seongnam. The root of socio-spatial problems Seongnam has at the present is related to the 8·10 Gwangju-grand complex-case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e distorted urban space of the old section of Seongnam results in inner-city redevelopment projects which is the biggest issue in Seongnam at the present. It is not reasonable thinking to separate the cultural barrier between the old and new sections of the city. In the meanwhile, there were a few of attempts casting light upon the nature and meaning of the case, but they failed to fine the present and practical meaning of the case, because they approached the case separately in both space and time. The meaning is created. The mechanism of creating meaning is systematization and placement. The favorable meaning to the group is created through different systematization and placement for each group related to the case. the meaning of the case in Seongnam at the present is created through systematization and placement, considering the controversy related to spatial and social matter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approaches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way of detouring inevitable process. It would be a right way to construct the meaning of the case in that way.

Keywords: The 8·10 Gwangju-grand complex-case, urban space, social structure, restructuring, systematization, imbalance, interpretation

참고문헌

- 김동춘. 2001. 『71년 광주대단지 8·10 항거의 재조명』. 8·10 30주년 기념사업회. 심포지엄 자료집.
- 김왕배. 1991. 『자본축적과 지역불균등발전』. 《공간과 사회》.
- 노용희. 1973. 『신도시개발론』. 박영사.
- 박지환. 2003. 『분당신도시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공간과 계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성남20년사편찬위원회. 1993. 《성남시사》.
- 성남YMCA시민회. 1987. 『성남의 역사현실과 시민의식』.
- 손정목. 1987.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계획의 발표와 여론의 동향』. 《도시문제》, 24권 7호.
- 신상용. 1971. 『광주대단지』. 《창조》, 10월호.
- 이동호. 1994. 『성남시 인구가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진경. 2002. 『사건의 철학과 역사유물론』. 『철학의 외부』. 그린비.
- 장세훈. 1991. 『광주대단지 사건과 3공 도시정책의 파행』. 《월간중앙》, 3월호.
- 조명래. 1996. 『분당신도시의 사회경제적 배경』. 민족건축미학연구회 엮음. 『18세기 신도시와 20세기 신도시』.
- 최병두. 1991. 『한국공간환경연구회의 현황과 과제』. 《공간과 사회》. 풀빛.
- 한상진. 1992. 『서울대도시권 신도시개발의 성격: 광주대단지와 분당신도시의 비교 연구』. 『한국의 지역문제와 노동계급』. 문학과 지성사.